



## 지진보험제도 전면 재검토

박정희 선임연구원

-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보험금 지급으로 민관 준비금(약 2.2조 엔)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새로운 재원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.
  - 동일본 대지진의 보험금 지급액은 총 1조 2,241억 엔으로 1995년 고베 대지진(783억 엔)에 비해 약 15배 이상 높은 수준임.
- 재무성은 지난 23일 지진보험제도<sup>1)</sup> 내용 전반을 관련 전문가<sup>2)</sup>들과 검토하기 시작하였음.
  - 검토 내용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현황, 미래 거대재해에 대비한 재원 확보, 지진 보험 이용자 확대 등을 목표로 계약자의 보험료 및 재해보상 수준 등임.
  - 현행 보험금 지급기준<sup>3)</sup>은 손해수준별 보상금액 차이가 너무 커 보상구분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, 가입 방식에 따른 보상금 차이<sup>4)</sup>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임.
- 재무성은 이번 프로젝트 팀이 제시하는 계약자의 보험료 수준과 재해 시 보상받는 보험금 수준 등을 바탕으로 손해보험회사와 의견 합의를 거친 뒤 올 가을 지진보험제도를 재검토할 방침임.

(마이니치 신문 외, 4/23)

1) 1964년 발생한 니가타 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보험책임을 분담하는 민관 일체의 지진보험제도가 출시되었으며, 일반계약자로부터 보험을 인수한 손보사는 전체 리스크를 일본지진재보험사(이하 '지재사'라 함)에 전가해 그 책임을 분산, 이 후 지재사는 일정한 리스크를 보유한 다음 원수보험사나 정부에 재해보험으로 리스크를 전가하는 형태임.

2) 지진 및 금융 전문가 12인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함.

3) 보험금 지급 기준은 건물 50% 이상 파괴 시 계약 금액 전액을 보상, 20~50% 반파인 경우에는 반액, 3~20% 미만의 일부 파손인 경우에는 5%를 보상하는 3단계 구분 방식으로 운영 중임.

4) 지진 등의 위험을 단독으로 가입하는 경우 화재보험을 주 계약으로 한 특약형식 가입이 있는데, 특약형식으로 가입 시 보험금은 계약 금액의 약 50% 수준에 머물러 이용자들의 보험금 상한액 인상 요구가 있어 보험료 수준 인상과 보상금액도 높이는 상품을 검토 중임.